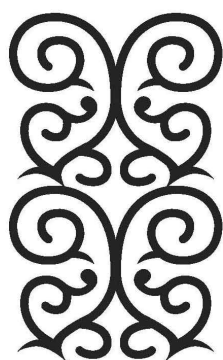


세션 1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기





【발표 1】



2003년 협약체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박 성 용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

1. 들어가는 말

2003년 10월, 유네스코 총회 문화분과위원회는 총회 전체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유네스코의 협약 중 하나로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3년 10월 17일 찬성 12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반대하는 국가 없이 채택되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4년 3월 15일에 처음으로 알제리가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협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서른 번째로 루마니아가 비준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인 2006년 4월 20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에 이어 11번째로 2005년 2월 9일에 협약에 가입하였다.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중, 2012년 10월 16일 현재 146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블록별로는 서유럽 지역(그룹 1)에서 17개 국가, 동유럽 지역에서 24개 국가(그룹2), 라틴 아메리카에서 27개 국가(그룹3),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7개 국가(4그룹), 아프리카지역에서 35개 국가(5-a그룹), 중동지역에서 16개 국가(5-b그룹)가 2012년 10월 16일 현재 가입되어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48개국)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은 북한이 지난 2008년 11월 21일에 105번째로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2004년 12월 2일, 6번째), 일본(2004년 6월 15일, 3번째), 몽골(2005년 6월 29일, 16번째) 등 5개 국가 모두가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약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즉, 협약이란 국제간의 규범으로서 협약 체결 당사국 간에 국제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협약 당사국들이 수행해야 할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을 고찰해 보고, 특히 협약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 보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구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서문과 총9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중 앞의 2개의 장은 협약과 관련한 개념의 정의(제1장)와 운영 조직(제2장)이고 뒤의 2개의 장은 경과규정(제8장)과 종결규정(제9장)이므로, 실질적인 협약의 내용은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제1조~제3조)에서는 협약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제1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정의와 함께 그 범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열거하고 있다.

제2장(제4조~제10조)에서는 협약상의 기관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당사국 총회, 협약 정부간위원회, 자문기구, 사무국 등 협약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제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와 제4장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이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앞의 국내외적인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및 행정적인 조치로서 국제협력과 지원, 무형문화유산보호기금, 정기보고서 등에 관한 것이다.

제3장(제11조~제15조)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취해야 할 의무 조항으로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하나 이상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일명 국가목록이라고도 불리는 목록작성이야말로 정기적인 회기보고서 제출을 제외한다면 협약이 유일하게 당사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제3장에는 목록작성 이외에 ‘그밖의 보호조치’와 ‘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제4장(제16조~제18조)은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제16조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제17조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제18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결국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는 일명 협약 목록의 등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협약상의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대한 등재와 모범사례의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

인 것이다.

그리고, 제5장(제19조~제24조)은 국제협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국제지원의 목적과 형식, 조건과 신청, 수혜당사국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제25조~제28조)은 무형문화유산기금의 성격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제7장은 당사국의 회기보고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경과조치로서 협약 이전에 실시하였던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결작 선언의 90개 목록들을 협약 체제하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협약이 채택되면서 결작 선언은 폐지되었는데, 일개의 프로그램인 결작 선언의 목록들을 국가 간의 계약인 협약 목록에 통합하면서 특히 협약 비가입국들의 목록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이었다. 그리고 제9장(제32조~제40조)은 종결규정으로 협약 비준, 가입, 발효, 탈퇴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3.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와 목록 등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의 핵심은 국제적 보호 조치와 국제적 보호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다. 여기에서는 협약의 국제적 보호 조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국제적 보호 활동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작성, 갱신 및 공표이고, 두 번째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작성, 갱신 및 공표이며, 세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하는 일이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과 관련하여, 제16조는 정부간위원회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된 당사국의 신청에 따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작성, 갱신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은 정부간위원회가 ‘대표목록의 작성, 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대해서도, 제17조는 정부간위원회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 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은 대표목록과 같이 정부간위원회가 ‘이 목록의 작성, 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극도의 긴급 상황에서 정부간위원회가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긴급보호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하여, 제18조는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정부간위원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정부간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소지역, 지역의 유산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간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지원 요청을 접수, 검토 및 승인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우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위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한다’고 하고 있다.

4.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목록의 등재 절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는 2가지 협약 목록의 등재 및 모범사례의 등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협약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간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2006년 6월에 개최된 제1차 협약 총회에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는 운영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정부간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협약 운영지침은 2008년 6월 제2차 협약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2012년 6월에 개정된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협약 목록의 등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1) 신청서 제출

제출 절차는 등재신청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협약 목록 등재를 원하는 국가는 긴급보호목록, 대표목록, 모범사례목록에 관한 각각의 양식을 사용하여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제출 당사국은 관련된 모든 공동체, 집단, 개인을 신청서 작성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와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등록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협약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2) 신청서 심의

신청서 심의 과정은 요구 기준에 대한 등재 신청서와 제안서의 적합성 평가를 포함한다.

첫째,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와 모범사례 등록 제안서의 심의는 정부간위원회의 자문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자문기구는 신청 종목의 등재 및 선정 여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

한 심의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한다. 자문기구의 설립은 협약 8.3 조항에 따른다. 정부간위원회는 자문기구 구성원의 공평한 지정학적 대표성과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6인의 개별 전문가와 6개의 비정부기구를 선정한다. 자문기구 위원 임기는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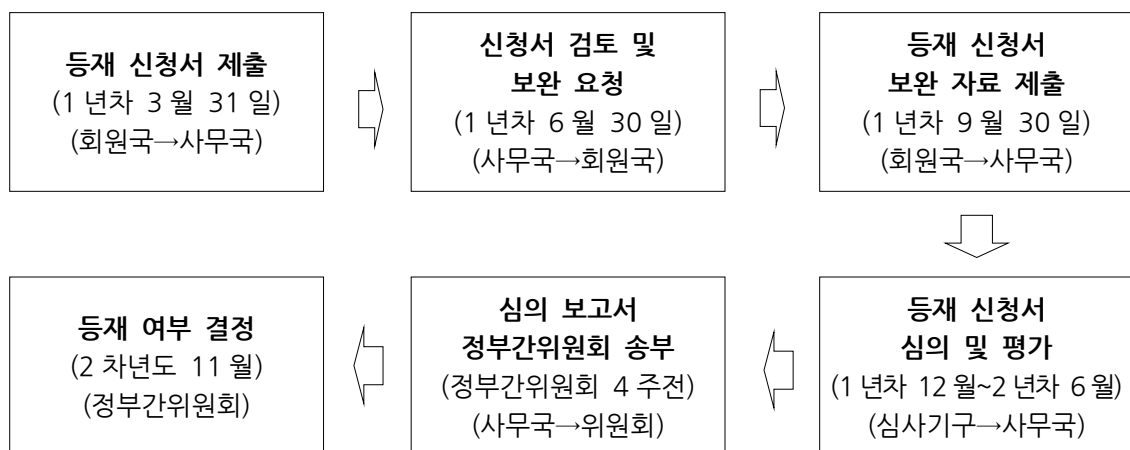
둘째,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는 정부간위원회의 보조기구에 의해 심의된다. 보조기구는 정부간위원회 회원국만으로 구성된다는 절차 규정 21조에 준하여 설립되었다.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보조기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과 수행 능력에 근거하여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의한다. 보조기구는 신청 종목의 대표 목록 등재 여부, 혹은 추가 정보를 위해 신청서의 제출국 회부 여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심의 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사무국이 요약문 및 심의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들의 개요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신청서와 심의 보고서는 의견수렴을 위해 당사국들에게도 공개된다.

(3) 정부간위원회의 신청서 평가

정부간위원회는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 등재 신청 종목의 등재 여부, 혹은 모범사례 신청 종목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목록의 경우 종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국은 재평가를 위해 해당 종목에 대한 신청서를 정부간위원회에 재제출할 수 있다. 신청 종목의 대표목록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4년 내에 동일 종목의 목록 등재 신청서 재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약 목록의 등재 신청 과정을 일정과 함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목록의 등재 현황

(1)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목록의 통합

협약 목록과 관련하여 첫 번째 작업은 협약 발효 이전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언된 유산을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하는 절차이었다. 걸작 선언은 협약 이전에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이었으나 협약이 발효되면서 동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세계유산을 모델로 한 걸작 선언 프로그램은 협약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목록 등재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걸작 선언 프로그램은 100개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였으며, 150개 이상의 신청 서류가 제출되어 2001년, 2003년, 2005년의 3회에 걸친 걸작 선언에 의해서 70개국의 90개 문화적 표현, 문화적 공간이 걸작으로서 선정되었다.

2001년 5월에 행해진 제1차 걸작 선언에서는 32개 후보 중에서 19개의 걸작이 선정되었고, 2003년 11월에는 56개 후보 중에서 28개의 걸작이 선정되어 추가되었으며, 2005년 11월에는 64개 후보 중에서 새롭게 43개를 선정하여 걸작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3차례에 걸쳐서 선정된 걸작들을 지역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로부터 14건, 아랍제국으로부터 8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 30건, 구주로부터 21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지역으로부터 17건이 등재되었다.

이렇게 선언된 걸작이라고 불리는 90개의 목록은 협약 비가입국의 유산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08년 11월 제3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합되었다.

걸작으로 선언된 한국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등 3개 종목도 이때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 등재되었다.

(2)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목록의 등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최고 의결기관인 협약 당사국 총회(매 2년마다 개최)와 6개 권역을 대표하는 24개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매년 개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 목록들과 모범사례에 대한 등재 및 등록 작업은 정부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다.

대표목록은 각 블록별 대표 6개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 산하의 보조기구에서,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는 블록별 대표 6개 비정부기구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에서 각각 심의되며 정부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의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서류는 협약 당사국이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

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미비 서류에 대한 보충 및 번역 작업 등을 거쳐,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보조기구 및 자문기구에서 심의를 받게 되며, 11월에 개최되는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등재 신청으로부터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된다.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는 지난 2009년의 첫 번째 등재 및 등록 작업을 통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처음 기념물, 건조물, 유적지 등의 유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그 복합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유산보호협약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운영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정부간위원회 초기 회의에서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원천인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상 세계유산과는 다른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약 목록 신청 건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자 국가간 신청 건수에 대한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고 무엇보다 과다한 신청 건수로 인하여 협약 사무국의 업무가 미비가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급기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약 사무국은 정부간위원회에 국가별 신청 건수에 대한 제한을 요청하였고 목록 등재 두 번째 해인 2010년부터 협약 목록에 대한 국가별 신청 건수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목록 등재가 이루어졌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협약 목록은 2009년 11월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대표목록은 34개 협약 당사국이 111건의 신청서를 제출되었으며 이 중 76건의 유산에 대해서만 등재 결정이 이루어졌다. 긴급보호목록은 9개국으로부터 15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2개의 유산이만 등재되었다. 모범사례는 3개국으로부터 5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어 3건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처용무, 강강술래,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남사당놀이, 영산재 등 5건의 유산이 등재되었다.

제2차 협약 목록은 2010년 11월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대표목록은 32개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147건의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54건의 유산만이 심의되어 최종적으로 47건의 유산이 등재되었다. 긴급보호목록은 2개국으로부터 3건이 신청되어 전년도에 처리되지 않은 2건과 함께 총 5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 이 중 4건에 대해서 등재가 결정되었으며 이 해에는 모범 사례에 대한 신청이 1건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대표목록에 ‘대목장’, ‘매사냥’(공동등재), ‘가곡’ 등 3건이 등재되었다.

제3차 협약 목록은 2011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대표목록은 이전에 보류되었던 신청서를 포함하여 22개국에서 신청한 총 107건의 신청서 중에서 54건만이 심의대상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건이 등재되었다. 긴급보호목록은 17개국으로부터 29건이 신청되어 11건이 등재되었으며, 모범사례는 제출

된 15건 중 5건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등 3건이 등재되었다.

제4차 협약 목록은 2012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대표목록은 이전에 보류되었던 55건을 포함한 214건의 등재 신청서 중에서 36건만이 심사대상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7건이 등재되었다. 긴급보호목록은 8개국으로부터 8건이 신청되어 4건이 등재되었으며, 모범사례는 2개국으로부터 제출된 2건이 선정되었다.

다음은 지금까지 등재된 협약 목록들의 현황이다.

□ 무형유산 협약 목록 등재 현황

연 도	합 계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	비 고
걸작 통합 (2008, 이스탄불)	90	90	-	-	
1 차 등재 (2009, 아부다비)	91	76	12	3	
2 차 등재 (2010, 나이로비)	51	47	4	-	
3 차 등재 (2011, 발리)	35	19	11	5	
4 차 등재 (2012, 파리)	33(31)	27(25)	4	2	○매사냥 추가 등재 ○세누포 공동체 발라폰 관련 관습 및 표현 추가 등재
총 계	300(298)	259(257)	31	10	

※ () 안 숫자는 추가 등재 건수 제외.

6. 맺음말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의 일환으로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등재 및 모범사례 등록 작업은 협약의 가시성을 증진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덕분에 1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151개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여 성공적인 협약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목록 등재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다한 등재 신청 건수로 말미암아 협약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12년 6월에 개최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4차 총회는 사무국과 심사 보조기구 및 자

문기구의 업무처리 양을 고려할 때 심사 총량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서 정부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총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제7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심사 총량을 60건 이하로 결정되었다.

둘째는 협약 목록에 있어서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불균형의 현상들은 먼저 국가 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중국(37건), 일본(21건), 한국(15건), 크로아티아(13건), 스페인(13건), 프랑스(11건), 이란(10건), 터키(10건), 인도(9건), 인도네시아(9건), 몽골(9건) 등 상위 11개 국가의 등재 건수가 157건(공동등재 중복 제외 건수 153건)으로 그동안의 등재 건수 총 298건 중 52%(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금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6개 블록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개국이 145건(공동등재 중복 제외 건수 141건)으로 49%(4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불균형은 목록 간 불균형인데 총 등재 건수 298건 중 대표목록이 257건으로 협약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긴급보호목록 31건과 모범사례 10건을 감안하면 대표목록이 협약 등재 목록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간위원회는 상기의 심사 총량제와 함께 심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2011년 11월에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정부간위원회는 우선순위에 대하여 첫째 공동 등재 신청 건, 둘째 협약 목록, 모범사례 및 국제 원조 건수가 없는 국가의 신청 건, 셋째 등재 및 등록, 수혜 건수가 적은 국가 순으로 제안하였고, 그리고 2012년 6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협약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첫째는 등재 유산 미 보유국의 신청 건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건, 둘째는 공동등재 신청 건, 셋째는 등재유산이 적은 국가의 신청 건으로 결정되었다.

넷째는 협약목록, 모범사례, 국제원조 등을 심사를 위한 비정부기구의 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유산협약을 모델로 상기 심사를 위한 자문기구를 상정하였다. 즉, 정부간위원회 산하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제 비정부기구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상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의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회기당 블록별 대표 6개의 비정부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가 비정부기구가 156개나 선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표목록은 임시기구인 블록별 국가대표들로 구성된 심사 보조기구가 담당하고 있고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 국제원조만을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자문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종목(element)의 바른 범위와 영역에 관한 정부 간 워킹그룹 개방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즉, 무형유산에 있어서 종목(element)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현재 등재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신청 국

가에 따라 해당 장르를 신청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특정 곡목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 국가가 특정 종목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와 유사한 해당 국가의 다른 종목이나 다른 국가의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 회의는 기존 목록에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의 공유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등재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로서 목록 등재는 초기 이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유산 협약의 목록 등재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향후 협약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는데 공헌할 것이라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고 국제간의 이해를 통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